





발행일: 2017년 6월 19일(월) 발행인: 전국금속노동조합경남지부 홍 지 욱 전화: 055)283-9081 팩스: 267-1266 http://www.kmwu02.org 주소: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압도적 가결로 역사적 기회를 이끌어 가자

22일 일괄조성신청… 27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결렬, 쟁의행위 절차 돌입

노조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각각 지난 13일과 15일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3일 9기 59차 중앙집행위원회·8차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해 쟁의행위 돌입 절차를 확정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오는 27일부터 29일까 지 일괄 진행한다. 단 교섭미진 및 단위상황 으로 일괄 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단위는 지 부 운영위 승인을 얻어 중앙쟁댕위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앙교섭, 사측 3차 제시안 나왔지만 "부족하다"

올해 중앙교섭 요구는 ▲산별교섭 법제화 ▲ 금속산업최저임금 1만원 ▲일터괴롭힘 금지 등이다. 산별교섭 법제화의 경우 현재의 단위 교섭만으로는 제조업 발전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마련한 요구안이다. 이외에도 일터괴롭힘 요구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일터괴롭힘을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는 목적의 요구안이다.

하지만 사용자협의회는 8차 교섭까지 3차 제 시안을 제출했지만 부족한 안으로 실망을 안 겼다. 사측은 8차 교섭에서 수정안을 제시했 지만 산별교섭 법제화의 경우 1차 제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산별교섭 법제화와 관련해 협력한다'는 수준의 제시안을 내 놓았다. 임 금의 경우도 현행보다 400원(6.6%)오른 시급 7천원을 제시했다. 일터괴롭힘 금지도 별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노조 요구안을 수 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집단교섭, 8차 교섭에서 결렬 선언

지부집단교섭도 지난 4월 6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1차 제시안 외에는 추가 제시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올해 집단교섭 요구안으로 ▲공민권 행사 보장 ▲사회연대기금 조성 ▲일반해고 금지 ▲기본급 154,883원(정기호봉승급분 제 외)의 신설, 개정 요구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5월 1차 제시안을 제출한 후 입 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1차 제시 안에서 공민권행사 보장과 관련해 법원과 노 동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출두하는 경우에 대 해서는 공민권 행사 보장을 수용하지 않았으 며, 사내하청 및 전 종업원에게 공민권행사를 보장하라는 지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 다.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 올해 지부는 사측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지난 해 지부집단교섭 합의사항이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후 세부적 상황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제시안을 제출 했다.

특히 사회연대기금 조성 요구와 관련해 지부 는 사측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단교섭 요구 수용이 참가 사업장 외 지부 전체 교섭 단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부는 올해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불참그룹 교섭과 두산그룹 교섭을 함께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측은 단 한차례도 참여 하지 않았으며 불참그룹 교섭군 노측 교섭위 원들은 출근선전전, 중식선전전 등을 통해 사 측을 규탄하고 나섰다. 두산그룹 교섭군 노측 교섭위원들도 본사 1인 시위와 오는 30일 규 탄 결의대회를 계획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가 고 있다.

압도적 가결로, 역사적 기회를 이끌어가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은 미진한 교섭 상황을 휴가전 타결로 이끌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구제화되는 시기에 앞서 노동자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노정교섭 요구로 노동정책 마련 에 대한 전략적 개입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 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 위원 30명 중 노동 은 2명 뿐인 상황에서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 을 키워내지 못하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적 기회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잃어 버릴 수밖에 없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마련한 역사적 기회에 노동자의 목소리로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 걸음.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로부터 시작이다.

들 **불** 9기 26호

지역 비정규직 한 목소리 낸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비정규 직 동지들이 오는 24일 정우상가 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

경남지역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 날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 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 노조할 권리를 요구한다. 참가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마트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 직 노동자, 조선 소 하청 노동자, 완성차 비정규 노 동자, 삼성전자서 비스 노동자, 학

교비정규 노동자들이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각 주체별로 선전용품을 활용해 정우상가에 서 민주당 경남도당까지 행진하 며 비정규 노동자의 요구를 창원 시민들과 정부 여당에 전달 할 예 정이다.

성동조선지회, RG발급 촉구 농성 투쟁



성동조선지회가 지난달부터 '중 소 조선소 대책마련 촉구 천막농 성 및 수출입은행 및 청와대 앞 1 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동조선은 그리스 선주로부터 유조선 7척을 3억달러에 수주했지만 선수금환급보증(아래 RG)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물량을 눈앞에 두고도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채권단이 RG발급을 조건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단과 사측의 구조조정 요구는 새정부의 정책기

조와는 반대로 정규직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워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박근 혜식 적폐이다.

지회는 지난 1월부터 확대간부 상경투쟁, 4월부터 매월 확대간 부와 휴직조합원 전체 상경투쟁 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28일에 는 중형조선소 살리기 상경투쟁 결의대회에 결합한다.

한편 성동조선의 고용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수주를 놓고도 계약이 되지 않아 지난 2월부터 대규모 휴직이 진행 중이다.

한화테크윈, 노조 반대에도 분할 강행



한화테크윈 사측이 지난 15일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업부 분할을 결정했다. 한화테크윈은 방산부문을 한화다이믹스(가칭), 에너지장비는 한화파워시스템(가칭), 산업용장비는 한화정밀기계(가칭)으로 분할을 추진한다. 주주총회 결정에 다라 오는 7월 1일까지 한화테크윈은 4개 법인 체제로 전환된다.

사측의 사업 분할 강행에 따라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삼성테크윈지 회는 불법적이 고 일방적인 분 할을 규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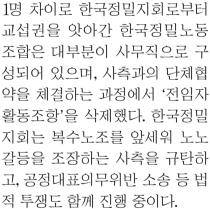
고용안정을 위한 교섭을 기업노 조인 한화테크윈노동조합과 진 행 중이다.

공동투쟁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양대노조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분할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 2017년 임금, 단체협약 교 섭부터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기 로 약속하고 예상되는 고용불안 에 적극 대응 중이다.

한국정밀 복수노조, 노조활동 포기

한국정밀 복수 노조가 노조활 동 권리를 포기 하는 단체협약 을 체결하고,지 난 15일 조인식 을 개최했다.



박장철 한국정밀지회장은 "우리는 금속노조를 사수하고, 현장 사수를 위해 현장 내 관리직들의 근거없는 출입을 거부한다"며 "금



작도소 사수 두생을 끝까지 털여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욱 지 부장도 "한국정밀 사측은 원활한 노사관계를 거부했다"며 "후진적 인 노동적폐를 청산하고자 하고 있는제 사측이 벌인 행위는 적폐 를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 라 규탄했다.

한편 한국정밀 사측은 꾸준히 금속노조에 대한 혐오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측 경영진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 노사협의회에서 금 속노조 탈퇴를 종용,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역사상 첫 비정규직 총파업 진행한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은 ▲박
근혜 적폐청산 ▲최저임금1만원
쟁취·비정규직철폐·저임금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개
혁·사회공공성강화 ▲노조할권
리쟁취·노동법전면개정 등을 요
구로 내 걸었다. 특히 이날 사회
적 총파업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
정규직 총파업이다.

지역에서는 학교 비정규 노동자 등이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30일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기득권 세력 눈치보지 말고 과감한 개혁에 나서라는 것이 6.30총파업의 요구고 구호"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연대투쟁이 6.30총파업"이라고 밝혔다.